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 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| 보도 | 2025.6.18.(수) 14:00 | 배포 | 2025.6.18.(수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| 책임자 | 팀 장 | 신동호 (02-3145-8412) |
| | | 담당자 | 수 석 | 손태윤 (02-3145-8416) |
| | 서민금융보호국 검사2팀 | 책임자 | 팀 장 | 김상희 (02-3145-8255) |
| | | 담당자 | 조사역 | 김진구 (02-3145-8259) |

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'25년 상반기 「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」를 개최합니다

〈주요 내용〉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위·지자체로 이원화된 **대부업 감독체계**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**일관성 있는 감독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**을 대상으로 **설명회**를 개최
 - 금번 설명회는 '25.6.18.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, 개정 「**대부업법**」 및 제정 「**개인채무자보호법**」의 주요내용을 **설명**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**현장 점검 방법** 등을 소개
- 개정 「**대부업법**」 시행('25.7.22.) 및 「**개인채무자보호법**」 본격 시행('25.4.17.)으로 대부업권 **관리 · 감독**이 전반적으로 **강화**되는 만큼,
 - 이번 설명회를 통해 **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** 등의 **신규 도입 규제**가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하며,
 -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(금융위, 지자체)간 **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 · 감독**을 위해 **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**할 예정

설명회 실시 개요

| | |
|------|---|
| 주요내용 | 신설제도(개정 「대부업법」,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) 및 대부업 현장점검·등록업무 실무 교육 |
| 일 시 | 2025.6.18.(수) 14:00~17:10 |
| 장 소 | 금감원 2층 대강당 |
| 참석자 |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94명 |

1 설명회 주요 내용

<참고> 설명회 세부 일정

| 구 분 | 교육 내용 | 강 사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세션 I (법 제·개정) | ■ 「대부업법」 개정 내용 및 유의 사항 | 금감원 |
| | ■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 내용 및 최근 이슈 | 대부금융협회 |
| | ■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이행 유의사항 | 금감원 |
| 세션 II (실무교육) | ■ 「대부업법」 주요 내용 및 현장점검 실무 | 금감원 |
| | ■ 대부업 등록실무 유의사항 | 금감원 |

가 「대부업법」 개정 및 유의사항

- 대부업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 「대부업법」 전면 개편 배경을 소개하고,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,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 「대부업법」의 주요 내용*을 설명

※ 개정 「대부업법」 주요 내용

- ◆ (등록 대부 관련) °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*, °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, °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°대표자 등의 다른 대부업자 대표 등 겸직 제한 등

* [시행령 입법예고] 개인의 경우 1천만원→ **1억원**, 법인은 5천만원→ **3억원**

- ◆ (불법 대부 관련) 불법사금융의 경우 °처벌이 강화* 되고, °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, °특히 반사회적 대부계약(초고금리 계약** 포함)은 계약 전체 무효화(원리금 상환의무 無) 등

* (현행)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) 10년이하 징역, 5억원 이하 벌금

**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

- 아울러, 최근 지자체·경찰과 실시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(25.4월, 인천) 결과*를 공유

*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불법사금융 접촉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, 미스터리쇼핑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대부 관련 문자·전화 쇄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

- 금융당국은 금번 설명회에서 전국 대부업자 순회설명회 개최, 법령 준수 여부 검사 계획을 공유

- 지자체에서도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,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줄 것을 당부

나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

-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본격 시행('25.4.17.*) 후 채무 상환·독촉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안내하고, 법령 주요 내용** 등에 대해 설명

* 법 시행 후 '25.1.17.~4.16. 중 계도기간 부여

** 추심총량제(7일 7회), 추심유예 요청권(사고, 질병 등 발생시),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

- 연체이자 산정,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사항임을 강조하고,
- 취약 차주 권익 보호 등 법령 취지가 대부업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근 이루어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 결과*를 공유하고, 이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소관 대부업자 지도를 요청

* (붙임) '대부업체(금융위 등록, 10개사)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현장점검 결과' 참조

<참고>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주요 내용

| 구분 | 세부항목 |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 |
|-------|----------|--|
| ①연체관리 | 통지 강화 | 기한이익 상실, 주택경매, 채권 매각시 사전통지 |
| | 연체이자 제한 | 약정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제한 |
| ②채권양도 | 장래이자 면제 | 순금산입 채권, 장기 연체채권 등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|
| | 양도횟수 제한 | 3회 이상 양도채권의 추가 양도금지 |
| ③채권추심 | 추심행위 규제 | 추심총량제(7일 7회), 추심연락 유예(재난 등 발생시),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(특정시간, 특정 연락수단 사용 금지) |
| ④채무조정 | 자율적 채무조정 | 조정절차 구축, 채무조정 관련 정보 안내 및 적절한 운영 |

다 현장점검 실무

- 현장점검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여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내용* 등을 설명하고, 주요 점검항목** 및 지적사례를 안내

* 대부계약서 작성·교부·보관 의무, 과잉대부 금지 등 광고 준수사항, 이자율 제한(연 20%) 등

** 고정사업장 및 대부계약의 적법성, 임원의 자격, 대부업 영위 지속 여부(영업실적 여부 등) 등

- 특히,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*, 미등록대부업자(불법사금융업자)와의 거래** 등은 대부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므로 현장점검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전달

* 연 20% 약정금리를 수취함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 부과 등

**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의 대부광고 게재 등

라 대부업 등록업무 실무

- 대부업자 등록(신규·변경·갱신) 절차, 구비서류, 점검항목 등을 안내하고, 등록 담당자가 **유의할 내용**을 설명
 - 「대부업법」 개정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이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될 예정이므로, 동 중개사이트 등록 이관시 지자체와 금감원간 협조 필요사항을 안내하고,
 - 대부업 등록 업무시 금감원이 자주 문의 받는 내용*과 지자체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

* 대부업자의 사업장 공유 가능 여부(업체별 1개 사업장 운영이 원칙), 대부업 등록증 발급시 확인사항(예: 대부업 등록번호와 관리목적의 전산관리부여번호 혼용에 유의) 등

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 및 지자체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,
 - 취약차주 보호와 관련이 큰 兩 법령 시행 전후에 동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자체 감독 역량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
- 향후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,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1 채무자 보호장치 작동현황

- ◆ 11만명 이상의 연체채무자가 도달주의, 이자제한, 추심총량제, 채무조정 등 신법상 채무자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
- ◆ 다만 채무조정, 추심연락 유예·유형제한 등 신청건수가 저조 하였으며, 이는 채무자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

법 시행후 채무자 보호장치 작동현황

| 구분 | 사전통지 | 이자부담 완화 | | 과다추심 억제 | | 자율 채무조정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연체이자 제한 | 장래이자 면제 | 추심총량제 (7일7회) | 추심유예· 유형제한 | |
| 적용건수 | 432 | 3,235 | 2,556 | 110,482 | - | 1,088* |
| 신청건수 | 432 | 3,235 | 2,556 | 110,489 | - | 1,126 |

* 채무조정 승인유형은 중복가능 : 원리금 감면(715건, 62.3%), 분할변제(397건, 34.6%), 이자율 조정(31건, 2.7%) 등

- ① **(사전통지)** 기한의 이익상실, 주택경매, 채권양도 등 통지 대상채권 432건 전부 기한 내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 보호
- ② **(이자부담 완화)** 연체채권 3,235건의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 이자를 미부과하고, 장래이자 면제 대상채권 2,556건 전부 이자면제 처리
- ③ **(과다추심 억제)** 법정 추심횟수(7일 7회) 초과 시 채무자 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심총량제를 준수하고 있음
 - 다만 ①추심유예제(재난, 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추심유예) 및 ②추심연락 유형 제한(특정 시간대·수단의 연락제한)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 내역 없음
- ④ **(자율 채무조정)** 동법 시행 후 6개월간 신청된 채무조정 1,126건 중 1,088건(96.6%)*에 대해 원리금 감면, 분할변제 등 조정 완료

* 채무조정 유형은 중복가능 : 원리금 감면(715건 62.3%), 분할변제(397건 34.6%), 이자율 조정(31건 2.7%) 등

➡ 동법 관련 내부통제 제도는 조기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, 추심 유예·유형제한 등 신설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추진할 예정

2

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미흡사례

- ◆ 통지서상 필수 안내사항 누락, 장래이자 면제여부에 대한 통지 절차 부재, 추심행위 판단·산정기준 미흡 등 내부통제 개선 필요
- ◆ 제도기간 중 일부 미흡사례가 확인되었으나, 주로 법시행 초기 법규 오해, 시스템 미비 등 판단 착오에 따른 경과실에 기인

제도기간 중 대부업체 미흡사례

| 구분 | 점검내용 | 지도사항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① 사전통지 | 관리미흡 | 도달일자 등 관련일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·관리하여 채권 회수조치를 통제 |
| | 안내사항 누락 | 채무조정요청권 등 안내사항을 보완하여 통지서 양식을 개정 |
| ② 채권양수도 | 장래이자 면제 통지미흡 | 채권 양수도 시 양수도계약서 상 장래이자 면제 사실의 통지주체, 통지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|
| ③ 추심행위 | 추심제한채권 추심 | 추심제한 사유 발생시 추심을 원천 차단하고, 추심착수통지서 출력 현황을 사후점검 |
| | 추심총량 관리미흡 | 추심횟수 산정대상을 법규에 따라 (재)정립하고 추심 연락 유형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|

- 1 **(사전통지 관리미흡)** 영업일이 아닌 역일로 도달일자를 판단하는 등 법규를 오해하여 주택경매 예정통지의 관리 미흡
- 2 **(안내사항 누락)** 주택경매예정통지서 양식 개정 후 담당자의 실수로 개정 전 양식을 사용하여 경매 신청예정일 등의 내용을 누락
- 3 **(장래이자 면제 통지미흡)** 채권 양수·도시 장래이자 면제의 통지주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채권의 양수인이 면제사실을 미통지(단, 장래이자 미수취)
- 4 **(추심제한채권 추심)** 신용회복신청 등 추심 제한사유가 발생했으나, 담당자 부재 등으로 동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추심 실시
- 5 **(추심총량 관리미흡)** 추심여부·횟수 등을 일괄 입력함에 따라 추심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 숙지가 미흡하여 추심총량제 초과

➡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으며, 업무관행 일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부협회 등에 전달하여 재발 방지를 유도할 예정